

社說

완전한 비핵화 정책 절실 — 노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을 보며

노대우 대통령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중요한 내용은 첫째,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하지 않으며 둘째,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조약협정'을 준수하여 핵시설과 핵물질을 철저히 국제사찰을 받도록하며 핵연료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셋째,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표방하는 것들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핵확장경쟁 명분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한반도 문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반도 군사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바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즉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맥을 같이한 동북아의 지속적인 헤게모니의 장악이 도사리고 있다. 그간 NCND정책에 묶여 핵문제에 대해 한미미도 언급하지 못하던 한국이 핵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 제한적인 핵추진권을 했을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8월2일 미국과의 핵관련 남북합성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걸프전의 경험에서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의 자신감, 지상력이 아닌 공해상해력으로서 핵무기산재가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9월28일 부시대통령은 핵전력 감축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한반도의 전술핵이 일련이내 철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았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신대탕트시대의 흐름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북은 선 핵무기철수·후 핵안전협정서명을, 남

과 미국은 선 서명·후 철수를 서로 주장, 대립해 왔던바 지난 7월15일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假)서명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지대 3원칙을 제시한것과 알고있다. 첫째, 남북한 비핵화지대 합의를 통한 공동선언 둘째, 미·소·중등 핵보유국이 공동선언을 법으로 보장할 것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한반도 비핵화대화를 지지 존중해줄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북의 핵안전협정서명을 강요, 일방적 핵사찰등을 고집하면서 공세를 계속하지 않았음은 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번일이 북의 핵사찰 명분획득으로 이용할 소지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남·한·미국도 북의 핵무기제조가능을 94~95년도로 보고 있음을 불태 공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알고자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하겠다. 한반도의 비핵화지대는 핵무기의 제조·반입·보유금지, 물론 탐사항공기나 전함의 국내 영공·영토·영해의 통과까지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완전한 비핵임을 불태 이는 미국의 숙원과 정반대인 셈이다.

남한정부가 70년대말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음을 돌이켜볼때 북한의 핵개발은 곧 남한의 핵개발이라는 한반도의 핵개발로 이어져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게 되는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한국은 내년도 국방예산이 최종예산 1조1백20억에서 8조7천7백90억원으로 책정되었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 평화구도의 정착이라는 설명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한다. 남의 핵철수와 북의 핵개발포기 그리고 끝내는 미군 철수를 통한 국내의 냉전구조의 해체만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구도로서 자리잡을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다.

입학정원 조정은 대학이 해야한다 — '92신입생모집요강 발표에 즈음해

92년도 입시요강이 지난 6일 발표되었다. 이번 요강에서 우리대학교는 주간에 전과공학과, 야간에 생물·지리·국제관계학과 및 러시아학과 각각 신설되게 된다. 수도권 대학 인원동결조치 이후 총학생 20명이 증원되었다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환영할 만한 사실이지만 개 신학과가 야간강사로 개설된 데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지난 89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야간이 통합되었던 정경대 야간학과 문제를 굳이 재개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서울캠퍼스 2개과, 수원캠퍼스 2개과 등 총 4개과의 야간학과 신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학의 학과신설은 최소한 3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신학과와 개설 또는 야간학부의 설치는 학교전체의 학문적 파급효과와 그학과의 정태를 예견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앞으로 있을 불만들을 막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증원방침과 관련해 숙명여대 등이 야간학과 개설에 반대한 것과 산업대들이 학제개편에 반발했던 점을 보더라도 각 학교당과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기초부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생물학과 야간학부의 신설은 해당학과 학생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야간학과를 신설해 놓고 구체적인 과 운영방안 및 교육환경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측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80년대 초 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양적으로만 확대해 온 오늘날 대학현실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한 대학에서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다른 학과들과의 학문적 연계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래의 발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교육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의 정원인정은 좀 더 신중히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89년에 정경대 이부대학의 주·야간 통합·전공과·학년의 분리·화학과 야간학부 신설에 따른 고통스런 '경험 및 '올해 문과대 생물·지리학과 야간학부 신설에 따른 체험 등 소중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학교발전을 도모하려는 학교측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다만 양적추진에서만의 증원계획만을 수립하는데 조금해할 것이 아니라 질적추진에서 좀 더 내실있는 교육환경조성계획과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대학의 입학정원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대학교육의 주체인 대학 당국과 논의하여 조정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입학정원은 대학 자율에 일임해야 함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지난주 각일간지 한모퉁이가 '자정결의 기자단탈퇴' 기사로 장식되었다. 이 사고의 사과는 바로 지난 불 '수서리'에 얽혀 터져나온 춘지관련 추문 못지않은 보사출입기자단 1억춘지사건 수습의 일환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일 '보사부에 출입하는 신문·방송·통신사 기자단이 지난 추석을 전후해 제야·제과·화장품 등 업계와 단체로부터 추석떡값과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모두 8천8백50만원의 거둬들었다.'고 보고하고, 관련기사에서 "춘지관행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시켜준 것으로 언론계도 대이상 부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일부터는 춘지사건수습을 위한 조치들이 속속 나왔다.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안병준)의 대국인 공동사과문 발표가 있었고, 3일과 4일에는 조선·한국·경향·동아 등의 기자들이

기자단을 탈퇴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한국일보'는 5일 보도면을 통해 파행적인 기자단 탈퇴와 기사작성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반대급부도 거부하며 실현 강령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공표할 것을 밝혔으며, '경향신문'도 6일 사고를 통해 '기자윤리강령'을 발표하였다. 기자윤리실천강령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책임, 기자의 품위에 대

당위성을 다시금 역설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춘지사건이 '한겨레신문'1일자에 보도된 직후 보사부에 기자를 내보내는 21개 신문·방송·통신사는 대부분 재빠르게 사과문을 발표한것과는 달리 이후 이에관한 보도는 거의 지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보다는 사건을 묻어

감추려는 언론사의 모습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춘지사건은 일개신문사에서 터뜨린 기사의 뒷수습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각 일간지는 문제의 핵심을 덮어버리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라면의 공업용우지 파동을 계기로 부패한 기자단을 해체하고 춘지거부를 결의한 이후 기자단은 운영비로 매월 3만원씩을 거둬 자체적으로 충당해오던 기자단체신에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춘지를 모았으며 그 사용내역까지 자세히 드러났다. 굳이 신문의 기사나 자료를 접하지 않고라도 뇌물성 금품인 춘지의 현상상을 국민 모두가 알고있다. 언론계의 해묵은 논쟁은 그 모습을 달리했으면 쉽게 치유될것 같지 않다. <이지환記者>



자기혁신 없는 언론의 춘지 보도

한 문제를 언급하며 반민주·반사회적 행위와 타락·부패를 거부하고 부당한 자기혁신으로 언론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각언론사에서 발표한 사과문이나 실천요강은 전부 언론사의 입문나 그

두기에 급급했다. '기자본연의 임무'와 '새로운 관행의 확립', '언론의 역할' 극히 본질적이고 당위적인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사회 거의 모든 부분의 비리 또는 문제는 과대포장하면서 자신의 치부는 애써

다는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해도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대신 개정안 내용중 총책임규제, 시간제 노동자를 내년에 관찰시킴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20년이 흘러갔지만 노동환경과 권리

'내 죽음을 헛되이 하는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열사가 불꽃으로 산화해간지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오는 13일은 그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에 항거해 분신한지 21년째 되는 날이다. 그의 죽음이 노동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죽음이후 70년대에 서북탄광의 파업 그리고 YH노동자사건으로 촉박한 노동운동사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몇몇 작업장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 되었을뿐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노동자가 스스로 주인임을 깨닫고 노동운동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는 87년 6월항쟁이었다. '호헌철폐'의 요구로 계속된 6월항쟁의 열기는 바로 7,8월 자각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연일 계속된 파업과 집회는 이제껏 감추었던 자신들의 힘을 깨닫는 시기였고 독재정권과 그와 연계된 재벌의 실체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7,8월투쟁으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노동운동은 89년 공안의 세찬 바람을 맞지만, 90년 1월 전협을 탄생시킴으로써 어렵지만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현대 굴리잇투쟁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해 왔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

으로 재제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의 악용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있기도 하다. 복수노조 금지조항(노동조합법 3조5항)의 경우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많은 경우, 노조가 허용해져서 노조원들에게 위반되고 있다. 또한 전

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해도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대신 개정안 내용중 총책임규제, 시간제 노동자를 내년에 관찰시킴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20년이 흘러갔지만 노동환경과 권리

장시간 노동·저임금·열악한 환경 근본변화 없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통한 노동통제 고도화

있다. 지난 89년 공안정국을 구실로 강화된 탄압은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로 계속된 노동자수가 모두 1천7백36명이라는 사실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탄압은 주로 공권력 투입에 의한 농성집압, 무노동 무임금, 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위기를 들이대며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단결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들이 '독소조항'으로 법률화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ILO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위)가 정부가 철회했던 노동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현재 공동대위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법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조항, 제3자개입금지조항, 공무원 단결권제한 등이 있다.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경우는 노동쟁의에 대한 타노조의 연대나 지원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나왔고, 현재, 어떠한 지원이나 관여도 법

는 실제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전태일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준수하라'는 절규는 거의 매년 노동법 개정 요구로 노동자의 권

노동자들도 사회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각하고 실천하고 있으나 노동조건과 근로환경의 점진개선, 노동법개정, 노동자의 권리가 획득될 때까지 전태일 열사는 1천만 노동자의 가슴속에 권력과 자본가에 대한 분노의 화신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송보영記者>



꿈을 꾸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젊은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에서 시작하여 이룩한 한강의 기적 — 우리가 달려온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허리띠를 늦추어도 될때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일등의 자리를 놓쳐 본적이 없는 선진국들이 뒤고 있으며 21세기까지 남은 시간도 10년 남짓밖에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좁혀 나가는 일 — 그것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삼성은 세계가 앞잡아 보고 나라 전체가 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도체를 개발하고 세계 두번째로 슈퍼 VHS를 만들었으며 8mm 캠코더용 렌즈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내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이룩한 작은 성과에 만족하며 좁은 우물속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젊은이는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않는 패기에 찬 젊은이, 맘에 쏘는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이,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젊은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21세기를 열광할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